

현안과 과제

■ 2016년 양회(兩會)와 중국 경제의 향방

 현대경제연구원

1. 2016년 중국 양회(兩會), '13.5규획'의 시작

- 2016년 양회는 올해 중국 경제의 주요 쟁점 문제 해소뿐 아니라, 13차 5개년 규획(13.5규획, 2016~2020년)을 시작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
- 오는 3월 3일부터 개최되는 중국 양회¹⁾는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개혁안을 토대로 공급측면의 정책이 제시될 예정
 - 지난해 12월의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올해 초 열린 지방양회에서는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짐
 - 특히,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 퇴출, 과잉생산 조정,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신흥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이 핵심
- 한편, 이번 양회는 13차 5개년 규획의 시작을 통해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, 금융시장 개혁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추진도 구체화될 전망
 - 13.5규획기간 동안 내수 주도의 성장, 산업 고도화, 기업부문 혁신촉진, 지역의 균형발전, 빈곤구제 등 개혁과제를 추진할 예정

< 향후 중국 경제 운영 계획 >

구 분		주 요 내 용
2016년 쟁점 과제	거시조절	- 확대 재정 및 금융통화 정책
	과잉투자 해소	- 제조업 2025을 통해 산업 재편 가속 - 과잉설비투자 분야에 대한 해소
	기업 건정성 제고	- 국유 및 민간 부문의 한계기업 퇴출 추진
	부동산 경기 활성화	- 부동산 재고 해소를 통한 2.3선 도시의 경기 활성화
	금융개혁 추진	- 금융 시스템 개선 및 개방화 조치 · 위안화, 증시 등 금융 불안요인 해소
13.5기간 거시정책 목표 (2016~2020)		- 전면적 샤오캉 사회(小康社會) 건설을 위한 정책 집중 · 2016~2020년은 중국이 목표로 하는 2021년 샤오캉 사회(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)를 이루는 중요한 시기 - GDP 6.5~7.0% 유지를 통한 내수 주도의 성장 달성

자료 : 중국국무원 등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.

1) 양회란 전국정치협상회의(政協) 및 전국인민대표대회(全人大)를 일컫는 말로 통상적으로 국가 정책자문기구 성격을 가지는 전국정치협상회의가 먼저 열리고 이어서 이를 후 최고 입법기관으로, 법제, 인사 및 예산심의 등을 결정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연이어 열리는 형식으로 진행된다.

2. 2016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

1) 주요 정책 방향

① 성장 전략: 투자의 확대 예상

○ 최근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서 올해 성장전략은 확장적 재정 및 금융·통화 정책을 통한 투자 주도의 성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짐

- 중국 경제는 소비 주도의 성장이 진행

- 중국의 GDP 대비 소비, 투자 비중은 2011년 각각 50.2%, 47.3%에서 2014년 각각 51.4%, 45.9%로 소비 주도의 성장이 점차 진행
- 반면, 수출은 동기준 25.5%에서 22.5%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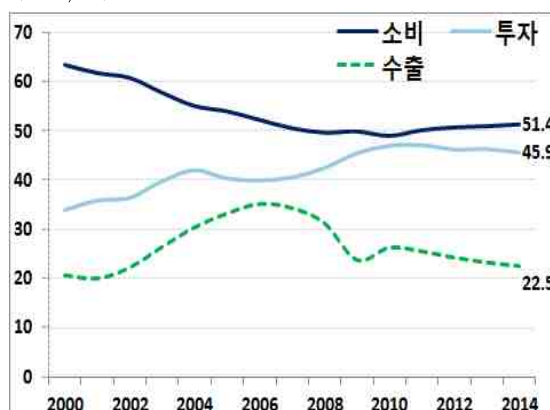
- 하지만, 최근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서 실적치가 목표치를 하회

- 중국 경제는 2015년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6.9%를 기록, 2012년 이후 4년 연속 7% 이하 성장이 지속
- 이에 따라 올해 성장 목표는 6.5%로 하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
- 이에 따라 성장 둔화 해소를 위해 올해 확장적 재정 및 금융통화 정책 추진이 가속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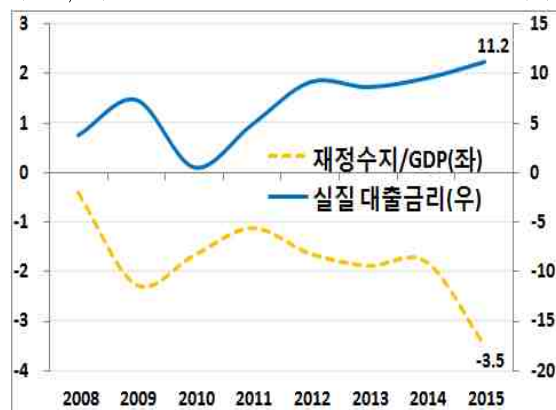
- 2016년 중국의 재정 정책은 2015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한 확장적 재정이 예상되며, 금융·통화도 지속적인 완화 가능성이 큼

< 중국의 GDP 대비 소비·투자·수출 비중 >
(비중, %)



자료 : 중국국가통계국 자료로 현경연 재정리.
주 : 2016년 목표 및 실적치는 예상 전망치.

< 중국의 재정수지 및 실질금리 추이 >
(비중, %)



자료 :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.
주 : 실질대출금리=명목대출금리-생산자물가.

2)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015년 3.5%로 2008년 0.4%보다 이미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, 금융통화 부문은 저물가에 따른 실질금리 급증을 제어기 위해 금리 및 기준율 인하(예대기준금리 및 기준율은 2014년 11월 이후 각각 6차례, 4차례 인하하고 있음)가 불가피한 상황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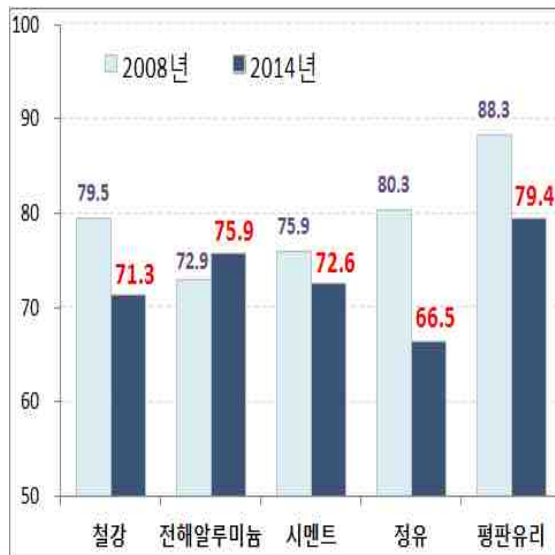
② 산업 구조조정: 고부가 산업재편 가속

○ 중국은 과잉생산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철강, 정유 등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과잉설비투자 해소 정책을 펼칠 예정

-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 가중
 - 2008~2014년 사이 중국의 철강, 전해알루미늄, 시멘트, 정유, 평판유리 등이 여전히 과잉설비투자 양상을 보이고 있음
 - 이에 따라, 중국 생산자물가지수(PPI)는 2012년 3월부터 47개월 연속 동기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
 - 특히, 2016년 1월 현재, 제철·압연, 석유가공(정유 등) 분야의 PPI 전년동기 대비 하락률은 각각 19.0%, 13.5%를 기록
- 중국정부는 과잉생산 조절정책을 통해 추가공급 부문을 지속적으로 제한
 - 일대일로(一帶一路)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 수요 확대를 추진하고,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도 상향 조정
 - 이에 따라, 중국 정부는 도시화 및 인프라건설 확대 등 수요 확충과 함께 과잉산업의 설비확장 제한 및 낙후제조설비 교체 등 공급제한 정책을 추진

< 주요 과잉생산 산업의 설비가동률 >

(기동률, %)



자료 : EU(2016)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.

< 과잉생산 해소 정책 >

구분	주요 내용
수요 확대	- 도시화 추진 · 중·소형 거점도시 마련 등
	- 일대일로(一帶一路) 프로젝트 기동 · 기초기반시설 건설수요 확대 등
공급 제한	- 과잉산업의 설비확장 제한 · 기술수준에 대한 기준 상향 ·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
	- 낙후된 제조설비 교체 · 기술수준 미달 설비 교체 가속화 · 기업간 합병 장려, 실업자 지원 강화

자료 : 중국국무원 등 자료로 현경원 정리.

○ 한편, “중국제조 2025”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고부가 제조업 육성 정책도 올해부터 가속될 전망

- 중국정부는 신산업 모델창출이 가능한 11개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융·복합 산업 육성을 가속
 - 중국정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추진, 인터넷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 발전 체제 구축을 위해 ‘인터넷 플러스 산업융합 발전 플랜(2015년 7월)’을 제시
 - 이는 모바일 인터넷, 빅데이터,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술과 전통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의 재편을 도모하는 계획임
 - 주요 분야는 제조업, 금융, 물류, 전자상거래, 인공지능 등 신흥 산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11개 분야임
- 또한,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부흥을 위한 “중국제조 2025”전략도 추진
 - 최근,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가 낮아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가치사슬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
 - 이에 따라 중국은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으로 ‘중국제조 2025’전략을 추진 중임
 - 이 전략은 총 3단계로 나누어 핵심부품소재 국산화, 산업로봇기술 개발, 에너지효율성 제고기술 개발, 첨단산업장비 개발 등 중점사업을 펼칠 예정

< 중국의 인터넷 기반 신산업 육성전략 > < ‘중국제조(中國製造) 2025’ 전략 >

구분	주요 내용		주요 내용
추진 목표	-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조업, 서비스업 신성장동력 창출 ▪ 인터넷을 통해 제조업, 농업, 에너지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노동생산성 제고 ▪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금융 육성 ▪ 사물인터넷,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행 인프라 시설 구축 ▪ 인공지능기술의 산업화 촉진 등	추진 전략	- 1단계(2015-25년) ▪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 진입
			- 2단계(2026-35년) ▪ 제조강국 내 중간 수준 확립
분야	- 신산업 모델창출이 가능한 11개 분야 ▪ 창업 혁신, 제조, 농업, 에너지, 금융, 민생, 물류, 전자상거래, 교통, 생태 환경, 인공지능 등	중점 프로젝트	- 3단계(2036-45년) ▪ 세계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 확립
			▪ 제조혁신능력센터 건설, 제조업종 구조 전환 ▪ 스마트 제조업 발전, 산업로봇화 발전 ▪ 공업기반 강화, 핵심기초기술 지원 ▪ 친환경 제조기술 개발, 에너지 효율 향상 ▪ 첨단설비 개발 등

자료 : 중국공업 및 정보화부.

자료 : 중국국무원(중국제조2025).

③ 기업 구조조정: 중장기적 효과 기대

○ 중국의 기업부문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국유 및 민간 기업에 대한 건전성과 운영효율성을 제고 하는 등 정책적 개선책을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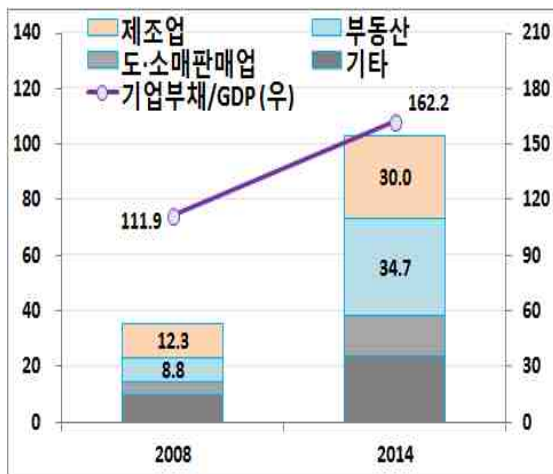
- 최근 중국은 기업부문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

- BIS에 따르면, 2015년 2/4분기 기준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43.7%로,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던 EU(228.2%)와 미국(230.9%)의 수준을 상회
-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에 따르면, 중국 기업의 부채규모는 2014년 현재 제조업(30조 위안), 부동산업(34.7조 위안) 중심으로 약 103.2조 위안에 달함
- GDP대비 비중은 2008년 약 112%에서 2014년 약 162%로 급증

- 이에 따라, 국유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환경 개선 등 정책적 조치가 예상

- 국유기업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비유통주 물량을 해체시킴과 동시에 민간 자본 유입을 통한 혼합소유제 제도를 도입 예정
-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직접금융 통로 개설,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환경 개선 등 조치를 실행

< 기업부문 부채 규모 추이 >
(조 위안) (비중, %)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(2016) 자료 재인용.
주 : 기타는 광업, 에너지생산·공급업, 건축업 등을 포함함.

< 국유·민간기업 구조조정 방향 >

구분	주요 내용
對 국유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유기업 운영 투명성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유기업 비유통주 물량 해제 · 혼합소유제도 도입 - 국유기업 경영건전성 재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유기업 부실자산 처리 등
對 민간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혁신기업 전용 증시 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신흥제조업분야 기업들을 위한 전용 증시 개장 예정 등 - 기업제도 환경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업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간소화,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이양 · 기업세수제도 조정 등

자료 : 中國國務院, 工業和信息化部, 中證網 등 자료를 참고.

④ 부동산 시장 활성화: 소폭 회복 예상

○ 최근 중국의 2, 3선 도시의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, 감세 등 부동산 재고 소진을 위한 정책 효과가 기대

-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은 1선 도시를 제외한 2·3선 도시의 경기 회복이 지연
 - 중국 1선도시 베이징(北京), 상하이(上海), 광저우(廣州), 선전(深圳) 등 4개 도시의 주택가격 증가율은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19.9% 증가
 - 하지만, 2·3선 도시는 동시점 각각 0.7%, -2.5% 증가에 그치며 회복세가 지연
- 이에 따라, 부동산 재고가 늘어나면서 최근 세제 감면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를 강화
 - 중국의 부동산 재고 면적은 지난 2007년 1억 3,500만 평방미터에서 2015년 7억 1900만 평방미터로 9년간 약 5배 급증
 - 중국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규제 완화 조치를 가속하고 있으며, 올해에는 부동산 취득세 및 영업세 인하 등 감세 조치를 시행

< 중국의 부동산 재고 현황 >

(백만 평방미터)

(비중, %)



자료 : CEIC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.

주 : 재고면적은 주택, 오피스텔, 영업용 빌딩 등을 포함.

< 최근 중국의 부동산 정책 현황 >

구분	주요 정책
2011	- 전국적으로 주택 구매제한 - 보유세 시범 시행(상하이, 충칭)
2013	- 양도차익 20% 부과 - 두 번째 주택구매시 현금보유 비중 70%로 상향
2014	- 생애 첫 주택구매자 지원, 금리우대 - 2011년 이후 구매 제한된 46개 도시 중 41개 도시 제한 해제
2015	-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 해제 - 주택 공적금 규제 완화 초안 제시
2016	- 부동산 취득세 및 영업세 인하

자료 : 중국재정부 등 자료 정리.

주 : 주택 공적금이란 일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주택구매를 위한 적립금.

⑤ 금융 개혁: 개방화 진전 전망

○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, 위안화 환율 시장화 등 지속적인 금융 개혁을 통해 금융 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

- 중국은 QFII, QDII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, 증권거래소 교차매매 허용 등 자본시장 개방화 조치를 빠르게 펼쳐가고 있음
 - 중국은 2002년, 2006년에 QFII와 QDII 가 도입되면서 자본시장의 제한적 개방이 진행되었으며, 2011년에는 RQFII 제도 도입
 - 2014년에는 상하이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의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후강통(滬港通)이 정식으로 개통
 - 올해에는 선강통(深港通) 도입과 더불어 QFII, RQFII 쿼터를 확대하여 해외 자본 유치를 가속화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 조치가 지속될 전망
- 위안화 환율은 2015년부터 시장수급을 적극 반영하는 환율 시스템 도입하면서 향후 위안화 환율 변동폭 추가 확대 등 시장화 조치를 실행할 예정
 - 2005년 복수통화 바스켓을 참조한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으나,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환율 시장화가 필요한 상황
 - 따라서, 2015년 8월부터는 전일 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을 수용해 당일 환율을 고시하는 등 위안화 환율의 시장성과 유연성 강화
 - 향후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추가 확대하는 등 환율 자율화 조치 가속 예정

< 중국 금융개혁 추진 방향 >

구분	현황	향후 방향
자본시장 개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QFII(적격외국기관투자자) 도입('02년) · QDII(적격국내기관투자자) 도입('06년) · 역외 위안화 무역결제업무 시범시행('09년) · RQFII(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) 도입('11년) · 후강통 개방('14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선강통 도입 (심천-홍콩간의 교차매매 허용) · 런던과 홍콩간의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룬강통(倫港通) 검토 · QFII, RQFII 쿼터확대를 통한 해외자본 유치 가속화 등
위안화 환율 시장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정환율제 시행(70년대 말까지) · 이중환율제 시행('93년까지) · 통화바스켓 기반 관리변동환율제 도입('05년) · 위안화환율 일일 변동폭 확대, $\pm 0.3\% \rightarrow \pm 0.5\%$('07년), $\pm 0.5\% \rightarrow \pm 1.0\%$('12년), $\pm 1.0\% \rightarrow \pm 2.0\%$('14년) · 시장수급을 반영한 매매기준을 고시제도 도입('15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안화환율 일일 변동폭 확대 예정, $\pm 2.0\% \rightarrow \pm 3.0\%$ 등

자료 : 중국국무원, 중국인민은행 등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.

2) 종합 평가

- 최근 중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나, 확대 재정 및 금융·통화 정책에 따른 산업, 부동산 등 실물부문에서 일부 구조조정 효과가 예상됨
- 중국 경제는 올해 확대 재정 및 금융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급락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
 - 2016년 중국 경제는 확장 재정 정책이 가속되면, 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됨
 - 또한, 최근 실질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예대 금리 및 기준을 인하를 통한 시장의 유동성 확대도 예상됨
- 또한, 산업 업그레이드, 부동산 경기 등에서도 정책 효과 가시화가 기대됨
 - 제조업 2025, 인터넷 플러스 등 고부가 산업 재편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산업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
 - 부동산 경기도 2·3선 도시의 재고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일부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
- 다만,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궤 하방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
 - 한계기업 퇴출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 대출 상환 지연 등 금융궤 리스크 발생 우려도 상존

< 2016년 중국의 경제 정책 전망 >

구분	정책 방향	전망
성장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수 주도의 성장 가속 - 확장 재정 및 금융·통화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% 중반대 성장 목표 예상 - 투자부문 확대 전망
산업 구조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잉설비투자 문제 해소 • 제조업 2025 추진 가속 - 인터넷과 융합한 신산업 육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잉설비투자 문제 다소 진전 •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지속 향상
기업 구조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계기업 퇴출 - 국유기업 건전성 제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유 및 민간기업 건전성 약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
부동산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동산 재고 해소 - 감세 등 규제 완화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·3선 도시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
금융 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율제도 재차 수정 예상 - 위안화 일일 변동폭 확대

자료 : 중국국무원, 중국인민은행 등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.

3. 시사점

-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, 양회 이후 가시화될 정책 효과에 대비해 기회요인은 활용하되 경기둔화에 따른 리스크도 적극 대응 필요
 - 첫째,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에 대비해 내수 진출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
 - 향후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나타날 내수 시장 확대에 대비해 맞춤형 對중국 소비재 수출 분야 발굴이 시급
 - 최근 중국정부는 교통 등 기초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투자본 진출 규제가 지속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IT, 건설 등 對 중국 진출 전략 마련도 검토
 - 또한 올해부터 가시화될 일대일로(一帶一路), 도시화 등 대규모 인프라 및 건설 수용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사업 진출 방안도 모색
 - 둘째, 중국 산업 경쟁력 향상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 등 산업 경쟁력 확보 노력도 병행
 - 향후 중국의 산업은 인터넷 등 IT와 제조업을 융합한 신개념 고부가 제조업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만큼 ICT 등 하이테크 산업 육성이 시급
 - 아울러, 국내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역량제고 등 비가격 경쟁력도 지속 필요
 - 셋째, 중국 경제의 돌발 리스크에도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 필요
 - 석유화학, IT 등 對중국 수출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중앙아시아, 남미 등 다양한 수출 활로 개척도 필요
 - 또, 최근 중국의 증시 불안 지속, 부채發 하방 압력 확대 등 리스크에도 대비해 외환시장의 상시적 안전판도 강화 지속

한재진 연구위원 (2072-6225, hzz72@hri.co.kr)

천용찬 선임 연구원 (2072-6274, junius73@hri.co.kr)